

# 전문성있는 지도단속을 바란다

—내년 7월 일원화되는 공해단속에 즈음하여—

**내년** 7월부터는 시·도에  
서 공해배출업체에  
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모든 환  
경행정업무를 전담하게 된다고  
한다. 무엇보다 지난 10여년 가  
까이 우왕좌왕 해왔던 공해단  
속권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 
실시에 발맞추어 일원화 되는  
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.

그 동안 환경청 개정 이후 중  
앙지도점검반이 발족되면서,  
환경청에서는 주로 대형 공해  
배출업체와 특정유해물질을 발  
생하는 업체의 지도단속을,  
시·도에서는 그 외 업체의 지  
도단속을 비롯하여 행정처분과  
인·허가업무를 담당하는 등  
단속과 처벌이 이원화되었기때  
문에 이로 인한 업체의 어려움  
과 불만도 컸었다. 이제 환경처  
가 중앙의 기획부서로서 우리  
의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이  
룩하는데 목표를 두고 국가적  
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 
따른 업무에 더욱 충실하기위  
해 배출업체의 지도단속업무를  
시·도에 이관하는 것은 당연  
한 귀결로 여겨진다.

그러나 정작 업무를 이양할  
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준비가  
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  
속권이 시·도로 이관된다면  
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  
이 우려되므로 이를 보완할 구

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.  
환경 분야는 고도의 전문기  
술과 경험을 겸비한 인력은 물



李龍雲  
(본연합회 회장)

론 공해배출물질을 측정할 수  
있는 장비를 필요로 한다. 그러  
나 이러한 인력과 장비를 제대  
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시·도  
에서 과연 제대로 업무를 수행  
할 수 있을런지가 의문이다.

지난 7월 시·군의 환경과 신  
설로 인하여 내무부에서는 각  
도별로 8백98명의 환경요원을  
채용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  
은 전문요원이 필요한 실정이다.  
설사 당장 인력과 측정장비  
를 갖춘다해도 전문성의 확보  
가 용이하지 않을뿐 아니라 교  
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 
하겠다.

환경관리인들은 업체의 환경  
업무전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 
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다. 그

런데 충분한 전문지식과 경험  
이 없는 지도단속 요원들이 현  
장에 나가 기술지도를 하고, 하  
자없는 단속을 하기엔 역부족  
일 것으로 생각된다. 따라서 한  
방편으로 그동안 보편적으로  
우수한 기술인력과 측정장비로  
효율적인 지도단속을 해왔다는  
평을 받고있는 환경청의 전문  
요원을 시·도에서 흡수하는  
방법도 재고해 볼만하다.

또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 
주요수입원인 기업과 단속 관  
청인 시·도와의 유착 가능성  
도 배제하기 어렵다. 현재도 단  
속에 있어서 적지 않은 압력과  
청탁이 있다는 실무 담당자들  
의 얘기고 보면 향후 단속문  
제로 빚어지는 비리가 지금보  
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  
다. 결국, 이러한 문제점들을  
현실적으로 제어할 대책이 없  
는한 환경오염은 더욱 악화될  
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귀착된  
다.

앞서도 언급했듯이 어느 부  
처가 전담하든 공해단속은 일  
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단, 업무가 이관되어 수반될  
환경행정의 공백상태를 막기  
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  
가 선결되어야만 한다. 그래야  
만 공해단속업무 일원화의 실  
질적인 의미가 있다. ◻